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 현장에서 **희망**하는 10대 정책

2012. 1. 17 (화)

동 학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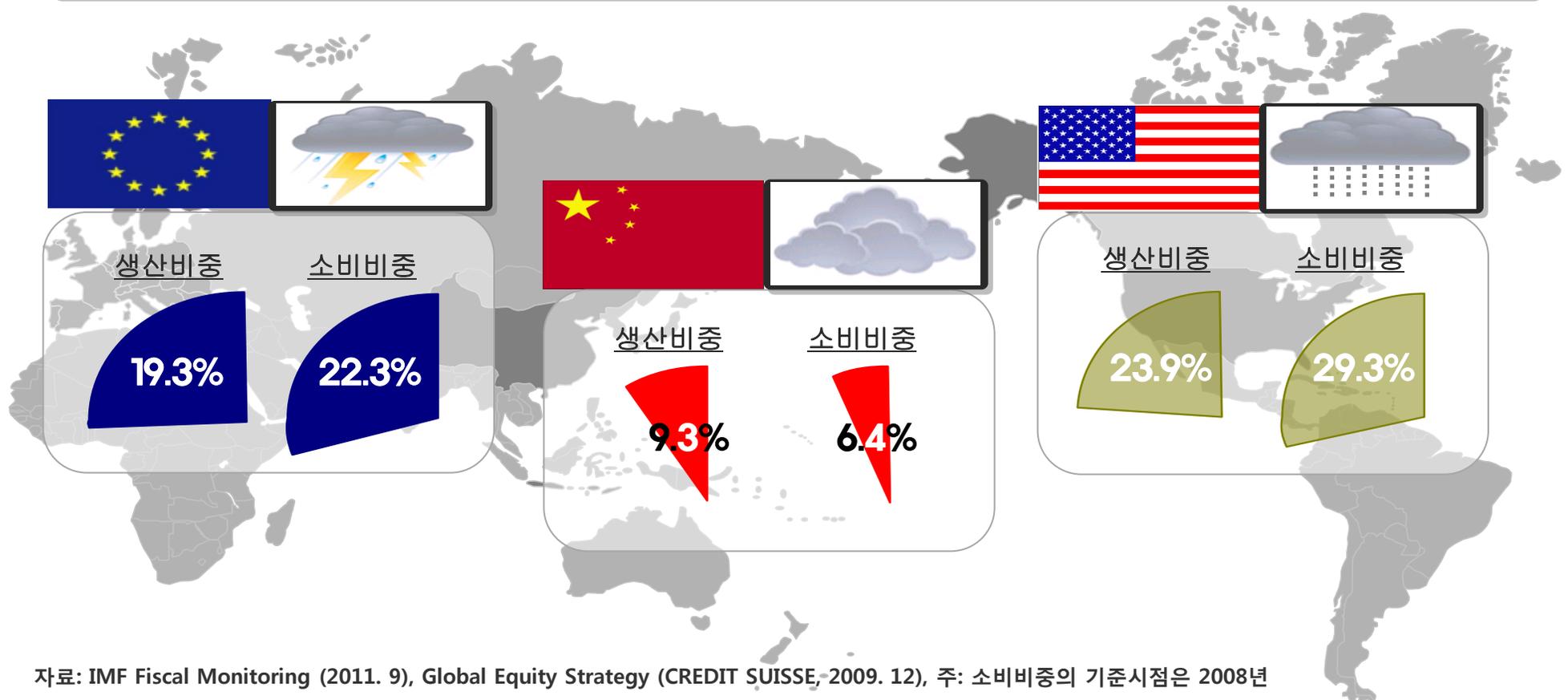
IBK경제연구소

I.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사상초유, 전세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危機

✓ 유로존(Euro-Zone), 미국 및 중국은 생산과 소비시장에서
 각각 52%(33조 달러)와 58%(18조 달러)를 차지

※ 세계총생산 및 세계총소비는 각각 약 63조 달러, 약 34조 달러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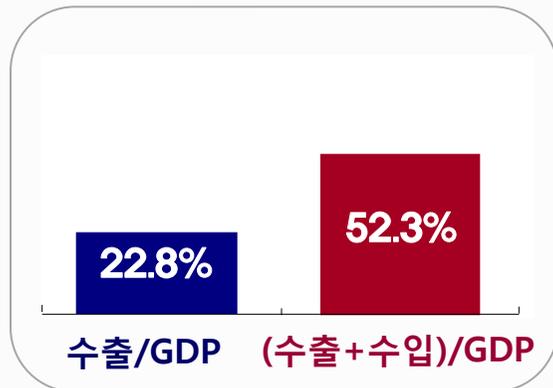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ing (2011. 9), Global Equity Strategy (CREDIT SUISSE, 2009. 12), 주: 소비비중의 기준시점은 2008년

대외경제 충격에 더욱 취약해진 한국경제

- ✓ 대외의존도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배 상승 (위기時 충격 가중)
- 대외의존도 상승은 양날의 칼 (Double-edged Sword)
- 똑같은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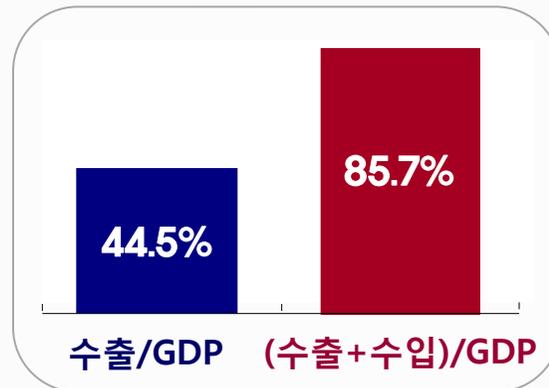
< 한국경제, 대외의존도 변화 >

IMF 외환위기 ('9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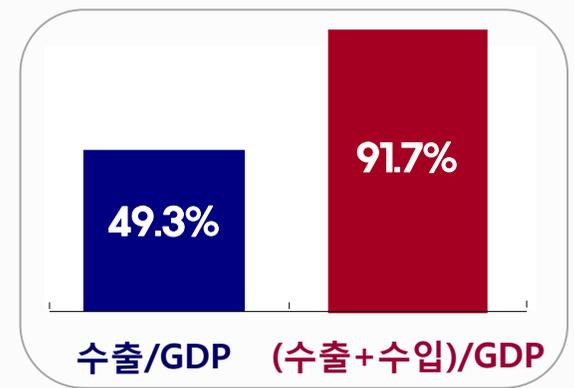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997년 기준

리먼사태 ('08.9)



자료: 한국은행, 2007년 기준

2nd Wave ('11.7)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기준

2012년 국내 GDP 성장률은 3%대로 낮아질 전망

✓ 실물경제 위축은 불가피 ⇒ 경제주체의 부실화 심화

세계경제 전망

구분	2011년	2012년
EC	3.7	3.5
OECD	3.8	3.4

국내경제 전망

구분	2011년	2012년
IBK	3.9	3.5
삼성	4.0	3.6
LG	3.8	3.4
UBS	3.3	1.9

국내 실물경제 둔화 불가피

가계

- 고용악화
- 실질소득 둔화
- 실질소비 둔화
- 적자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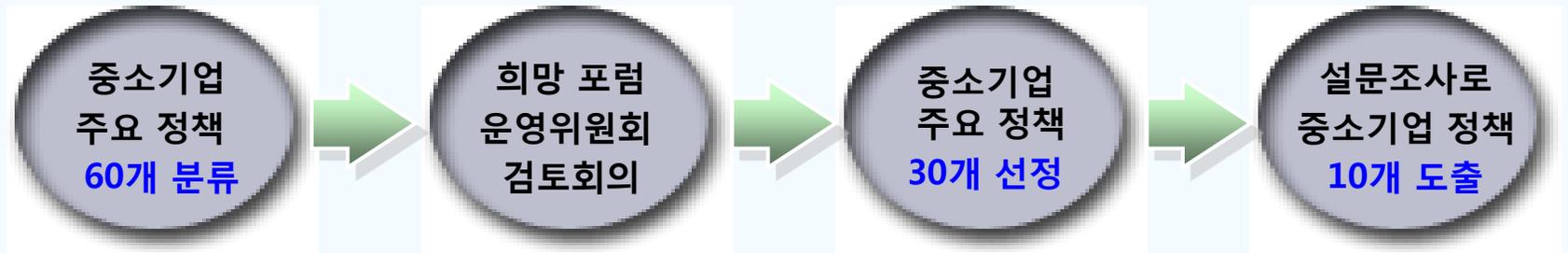
기업

- 생산 및 수출 감소
- 수익성 악화
- 설비투자 부진
- 구조조정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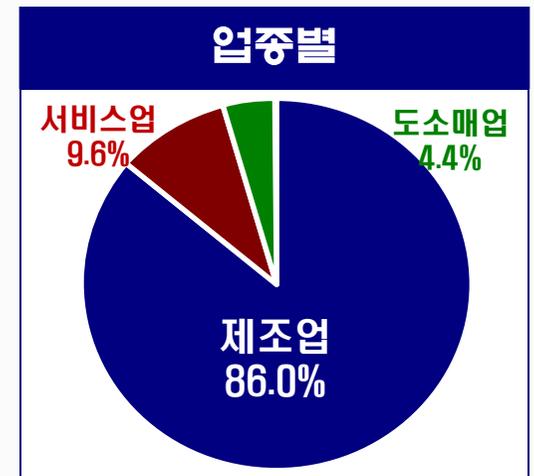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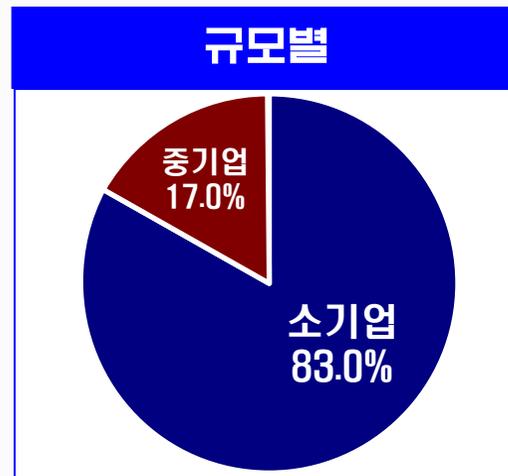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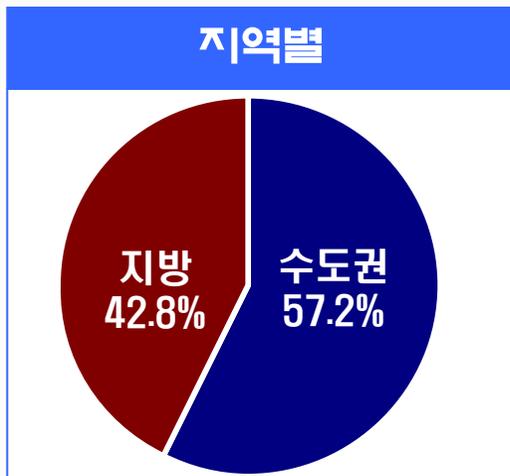
중소기업의 New 위기

Ⅱ. 중소기업 설문조사 개요

- ✓ 대상 : 689개 중소기업
- ✓ 기간 : 2012년 1월 2일 ~ 1월 10일
- ✓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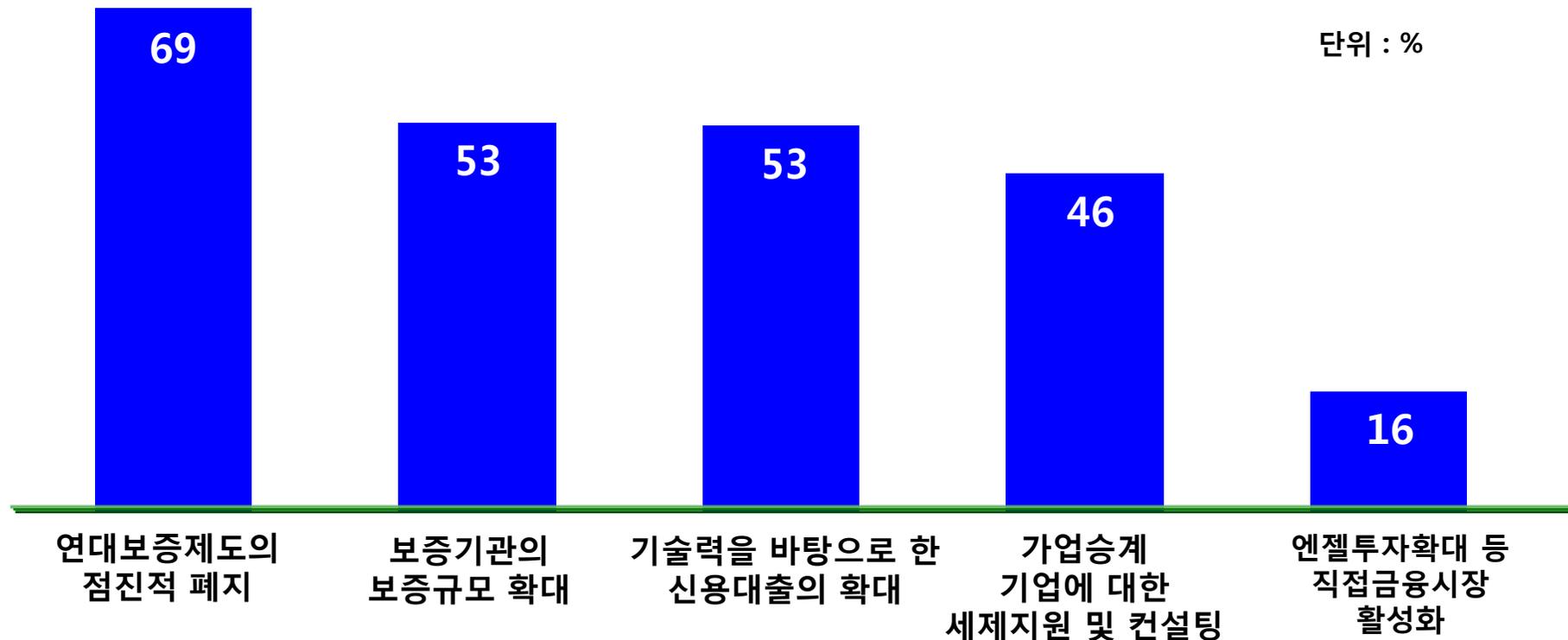
표본특성



자금 및 세제

✓ 연대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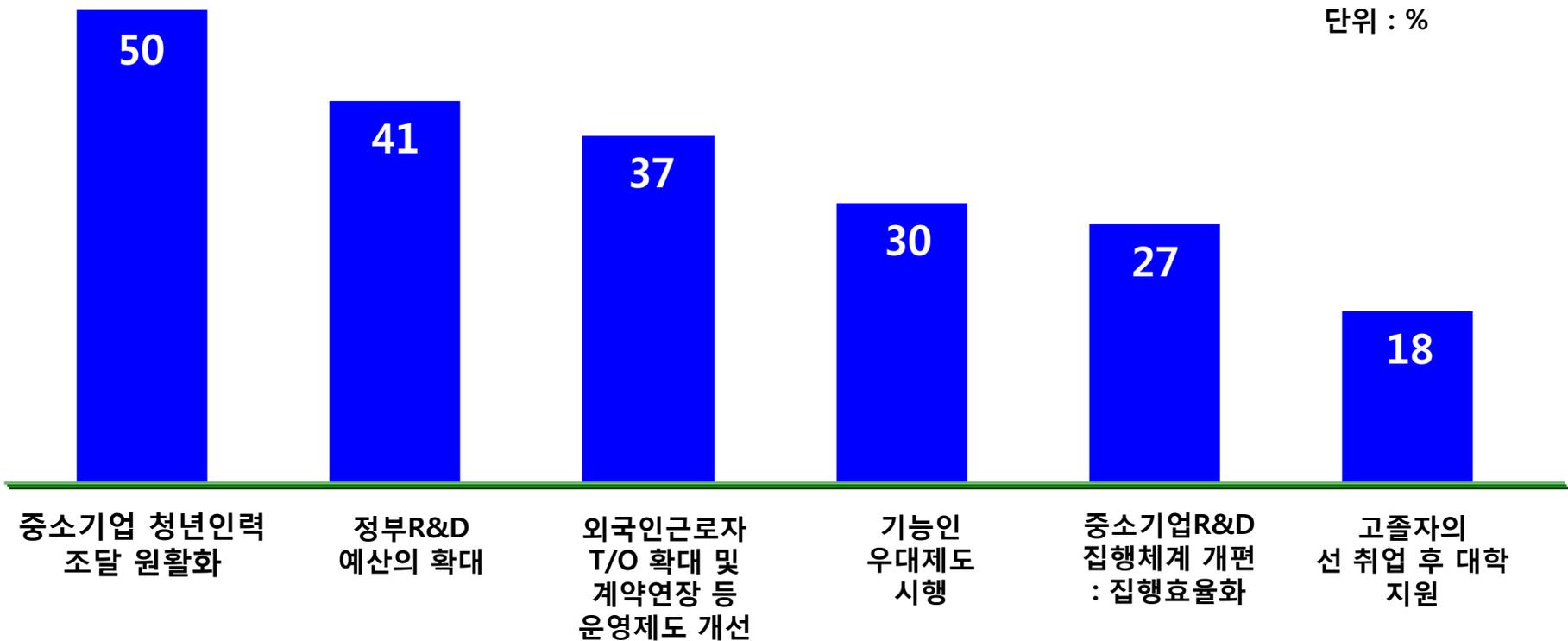
✓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컨설팅



인력 및 R&D

✓ 중소기업 청년인력 조달 원활화

✓ 정부R&D 예산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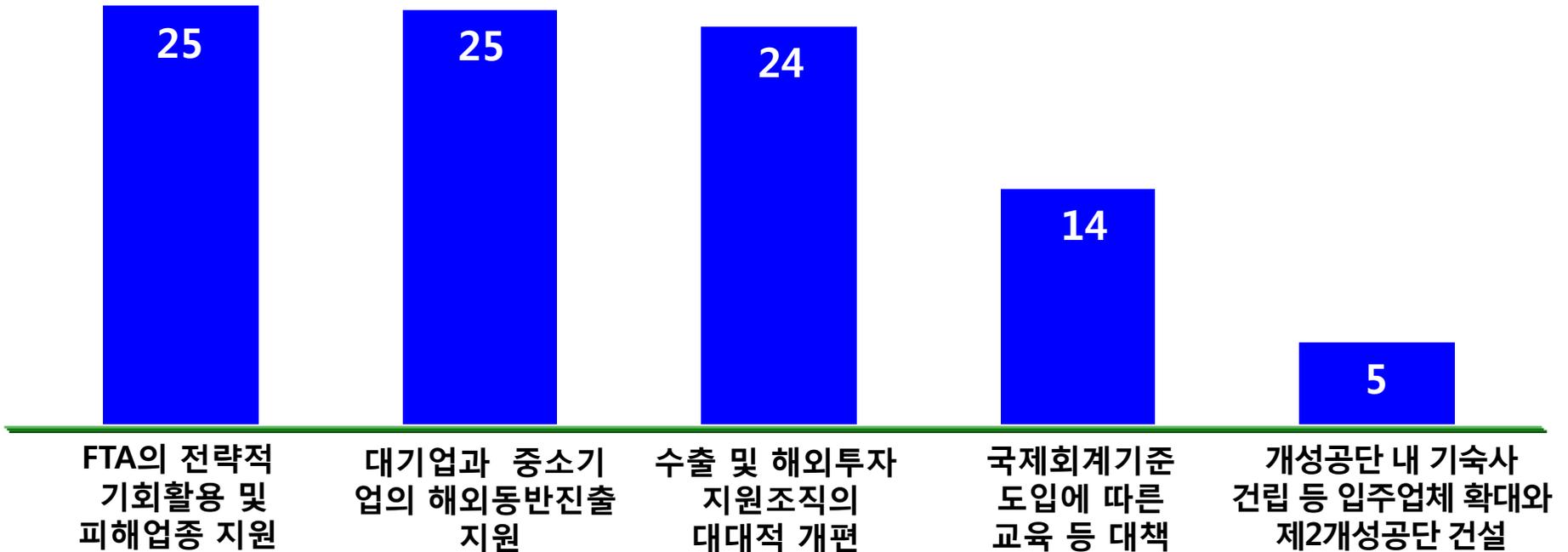


중소기업 글로벌화

✓ FTA의 전략적 기회활용 및 피해업종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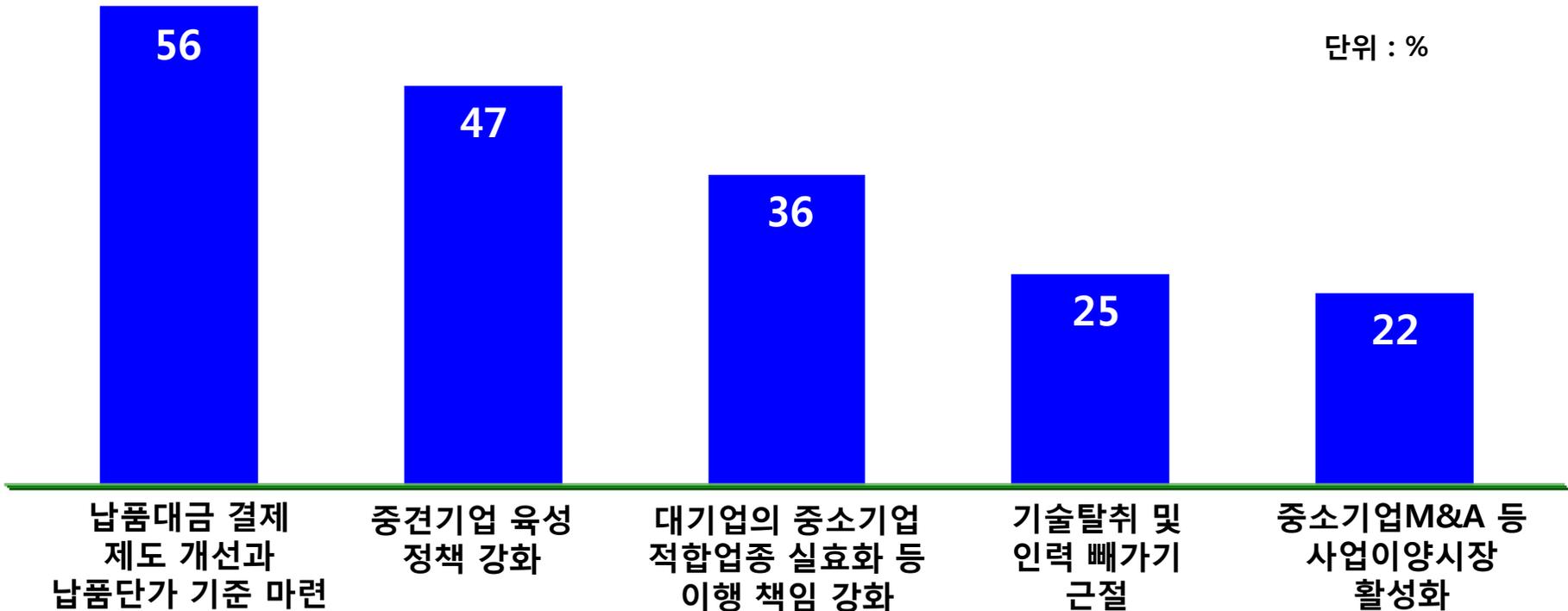
단위 : %



건강한 생태계

✓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과 납품단가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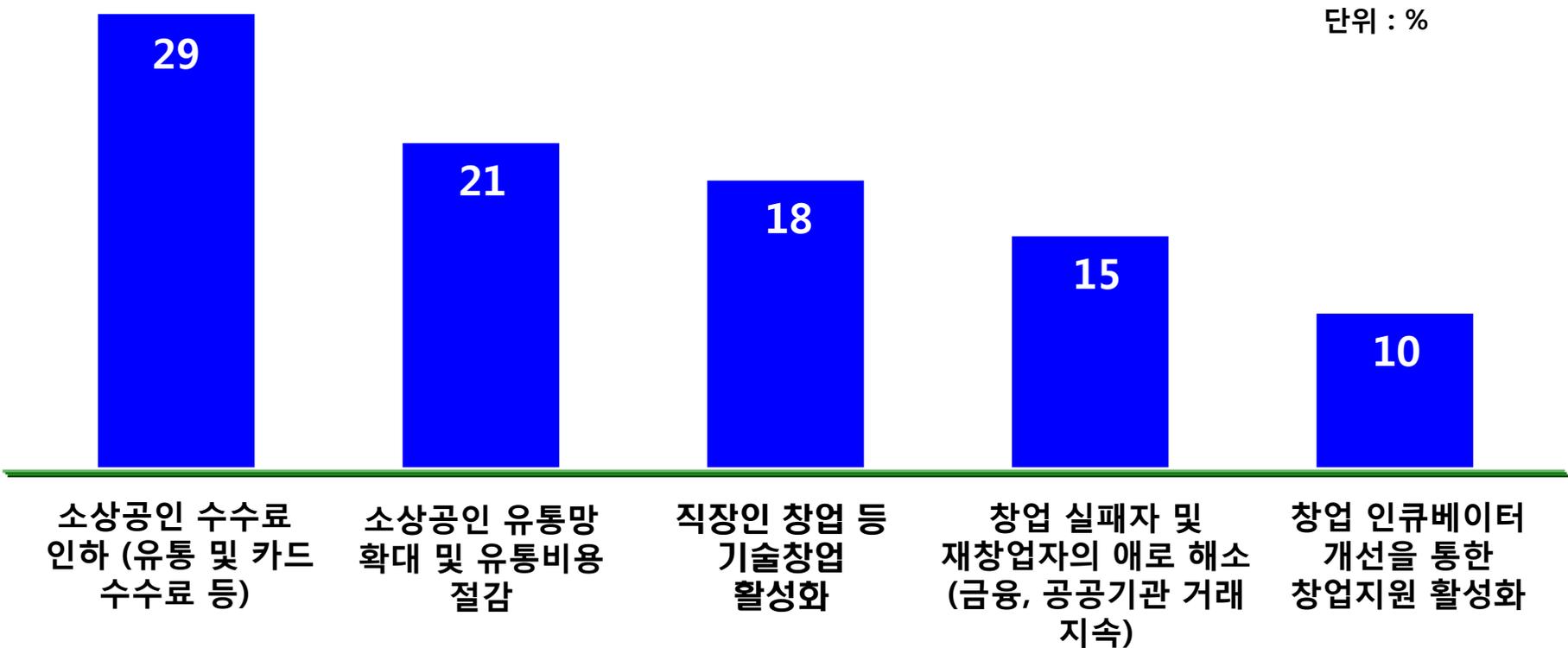
✓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소상공인 및 창업

✓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유통 및 카드수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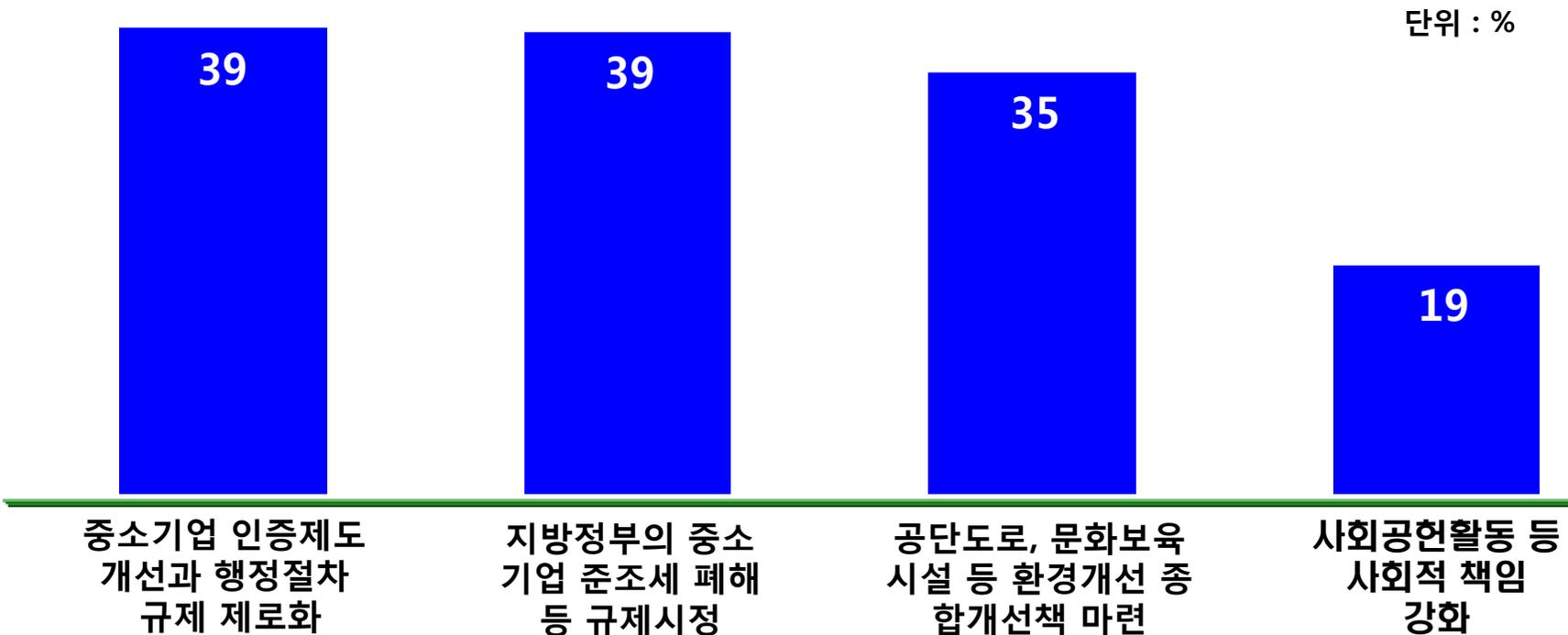
✓ 직장인 창업 등 기술창업 활성화



규제 및 기타

✓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규제 제로화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준조세 폐해 등 규제시정



Ⅲ . 중소기업 현장에서 희망하는 10대 정책

10위 : 응답률 38.6%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준조세 폐해 시정

준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

- **준조세 총량**
: 17조원 ('03) → 32조원 ('09)
- **조세대비 준조세 비중**
: 11.5 % ('03) → 15.4% ('09)
- **GDP대비 준조세 비중**
: 2.2% ('03) → 3.0% ('09)

자료 : 조세연구원(2010)

다양한 유형의 준조세는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가중

- **부담금, 회비, 기부금 등 각종 준조세로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65.3%**
- **조세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
: 매출액 200억 미만 181.5%
매출액 200억 이상 105.6%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0)

준조세의 투명성제고

- ✓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준조세는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
- ✓ 각종 준조세의 집행과정을 공개

준조세의 통폐합

- ✓ 준조세 설치 목적과 집행과정 등의 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은 폐지
- ✓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은 통합

9위 : 응답률 39.0%

- **인증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규제 제로화**

중소기업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증비용 및 사후관리 부담

- 이노비즈, 벤처기업, 경영혁신 등 유사인증제도 중복
- 건마크,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등 158개의 법정 및 민간 인증 난립
- 업체당 인증획득 및 관리비용 : 1,000~3,000만원 (28.2%)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07),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2011)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만연과 규제개혁의 미이행

- 관습에 의한 지방정부의 규제팽배 : 복잡한 공장인허가 행정절차
중앙과 지방간 과세표준의 불일치
-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방정부로 이행되는 정도 미흡

인증제도의 통폐합

- ✓ 유사 인증제도 통폐합 및 사후관리 부담 완화
- ✓ 인증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 ✓ 형식적인 인증 가점제 재검토

행정규제 상시점검

- ✓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
- ✓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이행실태 상시점검
- ✓ 조례, 규칙 등 지방 행정규제를 중앙정부에 맞춰 일괄 정비

8위 : 응답률 40.6%

- 정부 R&D예산의 양적 확대·질적 개선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가 미흡하여 중복지원이 다수 발생

- **중복지원 현황**
 - : 3개 이상 동시 수행 업체비중 12.6%
 - 6개 이상 동시 수행 업체비중 2.4%
- **동일 프로젝트로 여러 부처에서
지원 받는 사례 다수 발견**

자료 :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2010)

소수기업에 R&D자금이 집중지원

- **상위 1% 중소기업이 전체 정부
R&D지원의 10.9%를 차지**
- **반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R&D지원 미흡**

R&D의
양적 확대

- ✓ 중소기업 R&D사업 비중 및 지원규모 확대
- ✓ 국가 R&D사업에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R&D통합
시스템 구축

- ✓ 중소기업 R&D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중복지원 방지
- ✓ 통합시스템 내에서 R&D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7위 : 응답률 46.3%

-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컨설팅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함

- 과중한 승계비용, 사회의 부정적 인식, 후계자 양성 미흡 등
- 상속세율 최고 50%(할증과세 15%), 기업상속 공제요건 까다로움
: 공제율 70%, 공제한도 300억원
['12.1.1 시행]

기업가 정신 발휘 곤란, 기업활력 저하, 과중한 세금으로 폐업 위기 초래

- 소중한 무형자산 소멸, 생산설비 및 일자리 상실 등 국가경제적 큰 손실
- 정상적인 승계의 어려움으로 장수기업화 곤란
: 한국 중소기업 평균연령 12년
독일 히든 챔피언 평균연령 61년

세제지원
확대

- ✓ 최고세율 인하(50%→30%)
- ✓ 독일식 감면제 도입(매년 10%p, 10년간 감면)
- ✓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10년 고용 및 업력 유지)

컨설팅
강화

- ✓ 가업승계 컨설팅 전담기구 설립 및 지정

저변확대

- ✓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개선
- “부”의 대물림 → “책임”의 대물림
- ✓ 차세대 CEO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후계자 양성

6위 : 응답률 46.9%

- 국가산업의 허리, 중견기업 지속성장 정책 강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정체

- **업체 수 비중**
: 중소기업 99.7%, 중견기업 0.2%
- **지난 10년('00~'10) 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

자료 : 지식경제부(2010), IBK경제연구소(2011)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 급감, 규제 급증

- **조세, 금융, 연구개발 등 160개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규제 부담 증가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조직**
및 정책 부재

법적 근거
확산

- ✓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중견기업 개념 및 범위를
조세 및 공정거래 관련법령에도 일괄 반영

인프라
구축

- ✓ 정부 내 중견기업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마련
- ✓ 특히,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5위 : 응답률 50.4%

- 중소기업 청년인력 조달 원활화

청년 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력 부족 심화

- 중소기업의 20~30대 인력 구성 비율 급감
: 전체 종사자의 49.6%('10) → 43.5%('11)
- 중소기업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
: 취업 지원자가 없음(51.9%)
근무여건 열악으로 이직(42.9%)
취업희망자의 직무능력 부족(37.8%)

자료 : 중소기업청(2011)

청년 인력 부족으로 중소기업 노동력의 고령화

-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 가중
- 현장은 기술·기능인력이 필요하나,
공급인력은 대부분 고학력자가 많아
인력수급의 불일치 발생

청년기능
인력확대

- ✓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확대 개편
- ✓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

미스매칭
완화

- ✓ 구인자 및 구직자 DB의 지속적 확충으로 인력의 미스매칭 완화
- ✓ QWL(Quality of Working Life)을 통한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

4위 : 응답률 52.9%

-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대출은 상당부분이 담보대출

- 담보대출 비중이 79.8%
: 부동산 44.7%, 신용보증서 25.3%
예적금 담보 5.9%, 은행지급보증 3.9%
- 신용대출비중은 20.2%에 불과
: 순수신용 16.3%, 연대보증 3.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1)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지원이 미흡

- 기술력 평가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부족(34.6%)
기술평가의 전문인력부족(26.1%) 등

자료 : IBK경제연구소(2011)

면책 강화

- ✓ 기술신용대출(보증)로 인한 부실여신 발생 시 취급자
면책 강화

신용대출
비중확대

-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인력 양성

- ✓ 금융(보증)기관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3위 : 응답률 53.2%

-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및 한도 확대

획일적인 보증규모 축소

- 2011년 보증규모 1조원 축소
: 69.4조원('10) → 68.4조원('11)
- 전년도 실적저조를 이유로
보증기관의 즉각적인 보증상환 요구
- 10년 이상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획일적 보증지원 축소

자료 : 중소기업청(2011), IBK경제연구소(2011)

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 '보증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비중 58.3%
- 최근 경기악화로 보증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업체 증가

보증규모
양적확대

- ✓ 보증규모 축소는 필요하지만, 경기불안 下에서는 보증규모의 탄력적 운영
- ✓ 만기도래 보증의 기간연장 조치

보증한도
상향조정

- ✓ 실적보다는 사업성에 근거한 보증한도의 설정
- ✓ 창업 초기기업 및 기술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 원활화

2위 : 응답률 56.4%

-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과 납품단가 기준 마련**

끊임없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

- 대기업의 계속되는 원가절감 강조
→ 납품계약 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지 못한 채 거래
- 1, 2, 3차 하위 협력업체로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전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0)

어음결제로 인한 자금의 미스매칭과 미결제 위험

-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결제 받는 비율 56.3%
- 할인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부족과
미결제 위험 존재
- 1, 2차 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현금
수취, 3차 이하 기업에는 어음결제

납품단가
현실화

-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실행 확산

하도급법
개정·보완

-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기간을 90일 → 60일로 단축
- ✓ 조정신청 가능 원자재가격 상승률을 15% → 10%로 조정
- ✓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엄격하게 강화

어음제도
개선

- ✓ 발행어음 최장만기일 제한(90일), 배서양도 가능한 횡수제한
- ✓ 할인이 용이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결제제도 도입 연구

1위 : 응답률 69.2%

- 연대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

연대보증이 창업과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

- 창업기업의 25.1%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경험
-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적 금융 활동마저 침해

자료 : IBK경제연구소(2011)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해 심각

- 경영활동과 관련 없는 제3자 연대보증 요구
- 연대보증인의 교체도 용이하지 않음

연대보증
폐지

- ✓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 연대보증의 점진적 폐지

관리감독
강화

- ✓ 부당한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피해
최소화

- ✓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인 가족피해 최소화 및 재기(Second Chance) 방안 강구

중소기업 CEO리포트 IBK가 만드는



감사합니다.

